



보도시점

2023. 7. 27.(목) 11:00
7. 28.(금) 조간

배포

2023. 7. 27.(목) 09:00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

-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
-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 및 대규모 사육농장 자율차단 방역프로그램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국내 가금 산업 및 가금 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이하 조류인플루엔자)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.

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*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*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(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)

다만,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.

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·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,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.

1. 사전 예방 강화

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*하는 한편,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(9개소)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한다.

* (기존) 10월~3월 112~206개소 → (개선) 10월~3월 200개소 + 9월, 4월 10개소 추가

위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2025년까지 8천 건으로 확대*한다.

* ('23) 864건 → ('24) 4천 건 → ('25) 8천 건

이와 더불어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~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.

2.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

지금까지는 3~9월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'주의' 단계를 발령하였으나,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~9월 중에도 지역별로 '심각'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SOP)을 개정한다.

또한,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·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·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, 고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농가 단위 예찰·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.

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,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엄격한 방역조치 하에 ① 보호지역(500m~3km) 내 육계의 인접 시·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, ② 예찰지역(3~10km) 내 오리 입식 허용, ③ 방역대 해제기간 조정(30일→28일) 등

3. 책임 방역체계 구축

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,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.

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하였던 방역 강화조치*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(69호)까지 확대하고,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.

*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, 전용 사료·계란 운반차량 운영, 환적장 운영, 매일 소독 등

아울러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 및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.

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“금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금년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('23년 10월~'24년 2월)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“축사 출입시 강화 갈아신기·손 소독, 농장 내·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비교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홍기성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재 (044-201-2555)



1 사전 예방 강화

현 행
■ 10월~다음 해 3월까지 야생조류(분변, 포획, 폐사체) 예찰 강화 * 10월~3월 중 112~206개소에서 검사 ■ 중앙정부·지자체 정밀검사 + 민간기관 활용 검사 시범 도입(8백건) ■ H5/H7/H9형 각각 확인 ■ 관(官) 주도의 수동적 예찰 ■ 발생농장 위주 방역기관 중심 교육



개 선
■ 철새 서식 조사 확대* 및 조사지역 조정 * 10월~3월 200개소 + 9월, 4월 10개소 추가 ■ 과거 항원 최초 검출 철새도래지 집중 예찰 ■ 민간기관 활용 검사 본격 확대 시행* * ('24년) 4천건 → ('25년) 8천건 ■ 다중 동시 검출(H5/H7/H9형) 진단법 도입 ■ 농가 주도적 예찰 방식으로 전환 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전업 규모 농장 및 상시 출입자 집중 교육(매년 7~9월)

2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조치

현 행
■ 3~9월 발생 시, 전국 '주의' 단계 발령 ■ 전국 단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·적용 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모든 농장 관리 ■ 전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 ■ 일부 방역조치의 일률적인 적용



개 선
■ 3~9월 발생 시, 지역별 '심각' 단계 발령 ■ 과거 AI 다발 지역(24개 시·군)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 관리 ■ 지구 내 고위험 농가 선별 및 집중 관리 ■ 지역(시·도/시·군)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 ■ 위험수준 통제 하 방역조치 합리적 개선 * ①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허용, ②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, ③ 방역지역 해제기간 조정(30일→28) 등

3 가금농장 및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

현 행
■ 계열사의 분기별 계약사육농가 점검 및 결과 통보(계열사→지자체) ■ 30만수 이상(29호)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■ 산란계 농장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無 ■ 거짓으로 가금 입식 신고 시, 제재수단 無



개 선
■ 방역관리계획 수립·승인(계열사→지자체) 및 계약농가 미흡사항 개선조치 의무 부여 ■ 9월까지 계열농가 집중 교육·훈련 및 점검 ■ 20만수 이상(69호) 농장 방역관리 강화 ■ 30만수 이상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시범 도입 ■ 거짓으로 가금 입식 전 신고 시, 과태료 등 부과

4 지원 확대 및 방역 기반 조성

현 행
■ 가축방역 데이터 축적, 단순 통계 제공으로 방역조치 활용 한계 ■ 자발적 참여 농장에 한해 오리 사육제한 사업 지원 ■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오리 사육 ■ 일부 지자체 AI 방역 준비상황 미흡



개 선
■ KAHIS 고도화로 빅데이터 기반 위반도 평가·예측, 미소독 차량 정보 등 제공 ■ 고위험지역 내 오리 사육제한 명령 실시 ■ 방역친화형 오리사육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및 시설개선 유도방안 검토·추진 ■ 10월 전, 지자체 방역 준비상황 합동 점검